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2008. 5

통일정세분석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2008. 5

최진욱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형중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목 차

I. 서론	1
II. 2단계 비핵화 평가	2
1. 북·미 핵협상 실태	2
2. 미국의 의도	3
3. 북한의 의도	5
4. 3단계 비핵화 협상 전망	7
III.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10
1.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기본 태도	10
2. 비핵화 2단계 완료가 북한의 대남 태도에 미치는 영향	12
IV. 정책적 고려사항	14
1. 종합적 대북정책 구체화	14
2. 북한 경제 상황 평가 및 대북지원 방안 모색	14
3. 남북관계 재개 여건 조성	15

I. 서론

- 북한이 5월 8일 미국 측에 영변원자로 가동일지를 비롯한 핵관련 문건을 제출한 데 이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신고서 제출이 임박하였음.
- 미국은 문건 검토에 대해 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조만간 북한의 핵신고와 동시에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에 착수함으로써 2단계 비핵화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 북한은 2007년 2월 13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행동”에 합의하였고, 북한이 2007년 7월 영변원자로 가동을 중지함으로써 1단계 비핵화를 완료한 데 이어,
 - 2단계 비핵화는 2007년 10월 3일 북·미간 합의된 문서(이하 10·3합의)에 따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행동”을 이행하는 것임.
- 북한의 공식 신고 후, 6자회담이 개최되면 신고에 대한 검증 등 2단계 종료를 위한 나머지 조치를 논의하고 후속 회담을 통해 비핵화 3단계 진입을 위한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됨.
- 본 보고서는 비핵화 2단계 완료의 의미를 평가하고 북한의 대남정책을 전망한 후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함.

II. 2단계 비핵화 평가

1. 북·미 핵협상 실태

- 2단계 비핵화에 관한 10·3합의 문서는 북한과 미국 및 다른 6자회담 참가국의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 북한은 ▲2007년말까지 우라늄 문제를 포함 모든 핵 프로그램을 2007년 말까지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고, ▲5MW 원자로, 재처리시설, 연료봉 생산시설을 불능화하며,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knowhow)를 이전하지 않음.
 -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해제하며, 북한과 일본은 관계정상화를 위한 ‘진실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다른 국가들은 북한에게 중유 100만톤에 상당하는 경제, 에너지, 인도지원을 제공함.

- 10·3 합의 이행에서 핵 불능화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북한 핵활동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와 관련 우라늄 농축 활동(UEP)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 등 두개의 쟁점사항을 놓고 협상이 지체되어 왔음.

- 핵활동 신고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은 2008년 4월 8일 싱가포르에서 타협안에 도달함.
 - 북한은 플루토늄의 양을 신고하지만 핵심 쟁점인 농축우라늄 프로그램과 시리아 핵협력에 대해 북한을 대신해서 미국이 신고한 후 북한이 이를 인지(acknowledge)하고 항의(challenge)하지 않

으며 이를 공식 신고서가 아닌 북·미 ‘비밀 의사록’에 담기로 함.

- 싱가포르 합의 이후 다음과 같은 조치가 뒤따름.
 - 4월 24일 북한과 시리아 사이의 핵 협력에 관해 미 행정부는 의회에 브리핑을 하고 백악관은 “북한이 시리아와 핵협력을 한 것을 확신한다”는 논평을 발표 함.
 - 5월 10일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북한으로부터 영변핵 활동일지 1만 8천여쪽 분량을 평양에서 인도받아 귀환
 - 미국과 북한은 2단계 협상 이행 완료에 필요한 상호 행동의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이벤트를 연출하기로 함.
 - 미국은 북한과의 모니터링 협상을 거쳐 5월 17일, 50만톤의 식량 원조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2. 미국의 의도

- 비핵화 2단계 협상에서 미국은 북한이 제기하는 실질적 핵 위협 능력은 플루토늄 생산능력 및 보유량이라고 보고, 북한의 플루토늄의 생산능력 불능화와 보유량 확인에 초점을 두었음.
- 미국은 영변 원자로의 플루토늄 생산을 영구히 중단시킴으로써, 북한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고자 함.
 - 플루토늄 생산 시설의 불능화에 따라 플루토늄 추가 보유에 수반되는 핵 장치 보유량 증가, 추가 핵실험에 따른 핵 장치의 개선, 핵 물질의 확산이나 수출 등의 위협을 방지할 수 있게 됨.

- 비핵화 2단계 협상 타결로 미국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보유량 증대 위협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고 협상입지를 강화하는 전술을 사용하기가 어렵게 될 것으로 평가함.
- 나아가 비핵화 협상의 의제가 플루토늄 생산 중단과 능력의 불능화에서 플루토늄 보유량 검증, 보유 핵 무기 및 플루토늄의 폐기와 반출, 핵 시설 폐기 등 진일보된 의제로 발전하게 됨.
- 미국은 플루토늄 생산의 중단 및 불능화를 완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급성이 떨어지는 농축우라늄 프로그램과 시리아와 핵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함.
 - 농축우라늄과 시리아 핵협력 신고를 고집함으로써 불능화와 플루토늄 신고마저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우려하였음.
- 미국은 이와 같은 타협을 통해, 영변 원자로 재가동에 1년 정도의 시간이 요하는 수준에서 플루토늄 생산 능력이 불능화되고, 원자로 가동 일지를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에 대한 신고를 검증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함.
- 북한은 플루토늄 보유량을 대체로 4~5개의 핵 폭탄 제조에 충분한 분량인 30킬로그램이라고 미국에 비공식 통보했는 바, 이는 미국이 추정하고 있는 40~50킬로그램과는 차이가 있음.
 - 이에 관한 검증이 앞으로 북·미 협상의 중요한 의제로 등장할 것인 바 북한에 원자로 일지 검토, 핵 시설, 장치와 폐기물 처리장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임.

- 북한은 농축우라늄 생산 시도에 관하여 여전히 명확히 시인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3단계 비핵화 협상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간주됨.
 - 미국은 북한의 농축우라늄 생산 시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앞으로 완전한 설명을 요구하게 될 것임.
 - 미국은 북한의 농축우라늄 생산 관련 노력이 핵무기화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음.

- 북한의 핵 확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 역시 비핵화 3단계 진입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미국은 북한이 시리아에게 무엇을 제공했는지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알 키바 원자로 폭격으로 위협이 제거된 상태임.
 - 미국은 북한의 시리아에 대한 핵 수출 활동의 성격과 정도, 핵 수출 과정에 제3자가 개입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란과 유사한 거래를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완전한 설명을 요구하게 될 것임.

3. 북한의 의도

-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시설을 잠정적으로 불능화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플루토늄 생산 중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미 충분한 핵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간주될 것임.

- 북한은 이미 플루토늄을 30킬로그램에서 50킬로그램 정도 보유하고 있고, 상당 부분을 핵탄두화했을 것으로 추정됨.

○ 비핵화 2단계가 종료되더라도, 북한의 핵폐기를 다루는 3단계 협상은 더 어렵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장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은 잠재적 또는 '상징적' 핵보유국으로 인식될 것임.

○ 영변 원자로를 지속적으로 재가동하는 경우, 일 년에 핵 폭탄 1개 제조에 충분한 플루토늄 6킬로그램을 생산할 수 있으나, 그에 수반하는 정치적 고립과 긴장을 계산하면 효용이 크다고 할 수 없음.

○ 비핵화에 관한 합의 이행에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북한은 핵 시설을 재가동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음.

- 불능화 과정에서 제거된 모든 설비는 저장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서 보면 재조립과 재가동을 하는데 대략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임.

- 다만 불능화 대상 핵 시설에 대한 북한의 유지 보수 작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재가동하는 데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

○ 비핵화 2단계가 완료됨에 따라 북한은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압력을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 수 있음.

- 북한의 불능화와 신고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 및 적성국 교역법 적용에서 해제할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가능해 질 것임.

- 한국의 경우 개성공단 확대 문제 등 정부 주도 대규모 남북경협 사업의 진전 여부를 북한 비핵화 진전과 연계시켜 왔는 바, 남북 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됨.

4. 3단계 비핵화 협상 전망

- 앞으로 미국과 북한 그리고 다른 6자회담 참가국은 비핵화 2단계의 완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지만, 그 외의 주목할 만한 상황 진전은 당분간 어려울 것임.
- 북한의 핵 폐기 및 이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보상을 핵심 의제로 하는 비핵화 3단계 협상은 2단계 협상에 비해 훨씬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협상은 2009년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의 등장 이후 새로운 대북정책이 정립되고 나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비핵화 2단계에 관한 주요 협상은 북·미간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6자회담의 개최를 통해 정식으로 추진될 것임.
 - 북·미간 합의에 따라 신고대상은 플루토늄 총량, 영변원자로 가동일지, 핵심 핵시설인데 이에 관해 북·미간 타협이 이루어지면 신고서를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고, 의장국 중국은 4개국에 2주 정도 회람을 시킨 이후 빠르면 6월 초에 6자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됨.
 - 이후 미국은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등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 이에선 약 45일이 소요될 것임.

- 6자회담이 개최되면 검증방안을 놓고 당사사인 북한과 6자간의 밀고 당기는 새로운 협상이 시작되겠지만 검증기구 구성에 관한 완전한 합의에 이를 것인지는 미지수임.
- 비핵화 2단계 종료에 따라, 미국 측의 입장에서나 북한 측의 입장에서나 당분간 새로운 협상을 전개해야할 절실함이 존재하지 않을 것임.
- 더욱이 3단계 협상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는 바,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에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 비핵화 3단계의 주요 의제에서 북한이 이행해야 하는 것은 플루토늄 생산 시설의 해체, 핵무기 제조 계획의 해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해체,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간 안전협정 체결 및 비확산조약(NPT) 복귀 등이고,
 - 다른 5개국은 경수로 제공, 북한과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대북 에너지 및 경제 지원, 동북아 평화 안보 기구 구성,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 구성 등을 이행해야 함.
- 2단계 종료 이후 2009년 중후반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이 형성되어, 미국과 북한이 새롭게 협상을 시작하기 전까지 비핵화 협상과 북·미 관계 등은 소강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부시 행정부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대북 강경파인 매케인(John

McCain)이기 때문에 대북 유화 행보에서 제한을 받을 것임.

- 미국의 대선기간 중 북핵 문제는 주요 이슈로 등장하지 않은 채 망각될 가능성이 많지만, 한편에서는 비핵화 2단계 협상에서 미국이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비판이 대두할 수 있음.
-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등장까지 미국과 북한은 Track II 접촉을 통해 다음 국면을 위한 상호 탐색을 모색할 것임.

Ⅲ.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1.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기본 태도

- 북한의 최대관심사는 악화일로에 있는 체제안정이며, 이를 위해 북·미관계의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 왔음.
-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추진함으로써 북·미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 2007년 2·13합의 이후 북한의 전략이었음.
 - 북한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병행 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핵폐기 시점까지 미국의 압박과 체제불안정 등 ‘과도기’ 상황을 원만하게 관리함으로써 이 기간 중 미국과의 협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이명박 정부의 출범 후 북한은 과거 수년간 남북관계로부터 누렸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상실함.
 - 북한은 쌀과 비료 지원을 비롯한 남북경협으로부터의 경제적으로 이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 남한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을 ‘개혁적’ 지도자로 인식하고 북한의 개혁을 촉진시키기 위한 냉전구조 해체에 주력함.
-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병행발전 전략을 수정하여,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남북관계는 긴장상태를 유지함.
 - 북한의 대남 정책은 전통적인 통미봉남과 달리 절제된 긴장고조,

당국·비당국 분리, 이명박 정부 집중 공격 등의 특징을 보임.

-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는 대남 차원과 대내 차원의 두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대남 차원에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남한내 갈등을 부추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공고화되기 전에 좌절시키려는 것임.
 - 이를 위해 북한은 의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과잉해석하고 과잉대응하면서도 절제된 행동을 통해 남한의 여론을 사려고 노력함.
 - 당국·비당국 분리 정책을 통해 이명박 정부만 집중적으로 공격함.
- 대내 차원에서 북한은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비난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내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 남한내 보수정권의 출범으로 북한 엘리트 계층이 동요하고, 대북 인권압박으로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내부통제가 이완될 우려가 증대하였음.
 - 특히, 북한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으로 선전하여 왔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을 훼손하는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받아들 이면서 강력 대응을 불가피하게 함.

2. 비핵화 2단계 완료가 북한의 대남 태도에 미치는 영향

- 남한정부의 대북정책과 관계없이 북·미관계 개선은 북한의 최우선 목표이나 남북관계의 긴장은 북한을 북·미관계 진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음.
- 비핵화 2단계 완료 이후 북한은 영변의 냉각탑 폭파, 북한 예술단의 미국 공연 등 미국과의 다양한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 북·미관계 진전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한국을 더욱 압박하려 할 것임.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대남 강경태도는 북·미관계 진전을 통해 남한을 우회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임.
- 비핵화 2단계가 종료되더라도 북한은 한국정부에 먼저 손을 내밀지도 않을 것이며 한국정부의 어떠한 제안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2단계 비핵화 완료를 통해 북한은 미국의 대북압박에서 벗어나고 시급한 식량지원을 받았으며 북·미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둠으로써 여유가 생김.
-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후의 상황은 결코 북한이 낙관할 수 없음.
 - 검증과 폐기단계로 들어가면서 북핵 문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부시행정부 임기내 더 이상의 북·미관계 진전을 기대하기도 어려움.
-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북한의 행동은 남한의 태도변화를 이

끌어 낸 후 북한 주도의 남북관계를 만들겠다는 것임.

- 북한은 북·미간 교섭과정에서 당분간 통미봉남 정책을 통해 남한을 고립시킴으로써 압박하려 할 것이나, 궁극적으로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경협이 장애물이 제거되었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공세적인 남북경협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남한내 진보세력이 대북지원의 대폭 확대를 요구하면서 남남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의 단기적인 목표는 전면적인 개혁·개방보다는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확보하고,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임.
- 과거 경험에서 북·미관계 개선 없이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진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북한은 깨달았을 것임.
 - 북한은 여전히 개혁·개방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이에 대하여 분명히 문제제기를 한 바 있음.
 -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북한의 정책이 ‘개방없는 핵협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요컨대, 북한은 북·미관계 진전과 식량난을 버텨낼 수 있는 금년까지 대남강경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나 내년도 식량사정 악화와 북·미관계 경색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증대될 것임.

IV. 정책적 고려사항

1. 종합적 대북정책 구체화

- 북한의 대내외 전략상 금년도에는 북한이 대남긴장 수위를 높여 나가고 한국정부의 노력여하와 관계없이 남북관계의 경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남북관계를 억지로 풀려고 하거나 ‘대화를 위한 대화’에 집착할 필요는 없으나 남북관계를 방기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될 것임.
- 우리의 대북정책을 구체화하고 남북관계의 현상황을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음.

2. 북한 경제 상황 평가 및 대북지원 방안 모색

- 한국 정부 또는 민간단체는 북한 내부 경제현실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
- 북한실태에 관한 상이한 판단을 종합 정리하고 비교검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야 함.

- 현 상황에서 북한의 식량위기가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한국정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기아사태)’이 국내 정치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한국 사회와 정부는 거의 해마다 반복되면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북한 내부의 인도주의적 고통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함.
 - 북한 내부 인도적 상황에 대한 기본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는 바, 올바른 정책을 통해 자립적 해결을 모색하도록 촉구해야함.
 - 한국의 대북지원 수단과 방법은 북한 당국의 위기 재발 방지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함.
- 북한당국은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과장된 적대시 정책을 통해 남북 당국간 대화와 한국의 대북 인도지원을 가로막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와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대북 인도지원의 방법은 우선 일정량을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면서 대북 직접지원 방안을 강구함.

3. 남북관계 재개 여건 조성

- 당분간 북한당국은 한국정부의 정책 방향에 상관없이 대남 적대 자세를 취하면서 남북간 발전적 협력 재개를 방해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지만, 중기적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이 태도를 바꾸어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에 호응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어야 함.

- 현실적으로 북한당국의 최대 관심은 남북 관계를 통해 체제유지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김정일 정권을 인정받고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관심이 있음.
- 한국 정부는 북한당국이 비핵화에 전향적 자세를 취한 것에 대해 공식 성명이나 국제무대 발언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당국 간 대화를 재개하도록 촉구해야 함.
 - 한국 정부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의 맥락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포함한 남북 당국간에 이루어진 기존 합의를 이행하는 방안을 북한측에 제안할 필요가 있음.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정기회원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기회원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회원의 구분

- 1)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2)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가입방법

- 1)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2)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3)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가입기간

- 1)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 회원으로서의 자격유지
- 2)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실 분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4. 회원의 특전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15-20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협동연구총서(연평균 5-10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5. 회원가입 문의

- (142-728)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전화: 901-2559, FAX: 901-2547)

※ 가입기간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통일정세분석 2008-08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화 : 901-2525(代), 팩스 : 901-2544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 2272-1767
인쇄일	2008년 5월 일
발행일	2008년 5월 일
